

시장은 지속적 확대, 업체간 혼선은 여전 전자책, 서비스 공급 기준안 마련 시급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전자책 유통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2004년부터 연평균 30% 내외의 성장을 이룩한 전자책 업계는 지난해부터 공공도서관 디지털라이브러리 구축과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전자도서관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규모가 825억 원을 육박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적 성장과 달리 업계 내부에서는 유통 및 영업 시스템의 혼선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전자책 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서관계가 종이책을 기준으로 한 콘텐츠 가격 및 공급 물량을 책정해 온 탓에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학교 및 공공도서관별로 평균 5카피씩을 납품해왔다. 그

러나 전자책 제조업체 간 영업 경쟁 과열로 인해 예산 절감에 민감한 관공서와 도서관이 구입물량을 제한하면서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2004년에는 각 지방 교육청에서 전자책 20카피를 구매, 교육청 산하 평균 500여 개의 초·중·고교에서 이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소량의 콘텐츠를 구입, 전국 도서관에 유통할 수 있도록 서버를 개방해 학술도서 콘텐츠 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시장 축소 위협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업계 내의 이견 대립이 만만치 않다. 전자책 선발업체인 (주)북토피아와 후발주자인 교보문고 양측이 서로 다른 영업 방식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주)북토피아는 최저 공급 카피수를 정해 시장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교보문고는 업체 간 자유경쟁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자출판협회에 따르면 (주)북토피아측은 전자책 구매 주요 기관인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소량의 콘텐츠만을 구매하면 시장이 점차 축소되고 결국 공급업체들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보문고측은 도서관의 콘텐츠 구매 예산이 한정적이므로 한 종당 5카피 보다는 한 카피씩 5종을 납품해야 디지털 도서관 이용율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이 커진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주)북토피아, 교보문고, 조은커뮤니티, (주)위즈시스템 등 전자출판 유관 8개 단체가 모여 대책논의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을 주관한 대한출판문화협회 강희일 부회장은 “출판사들의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해 기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출판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책 업계의 불안정한 공급 시스템은 이용자 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자책은 제작 방식에서도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도서관에 서로 다른 두 업체의 전자책이 공급되었을 경우, 이용객들은 뷰어 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자책 업계의 내부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는 7월 중 협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자출판협회 장기영 사무국장은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본 중심의 디지털도서관이 구축된 미국과 달리 정부차원의 디지털도서관 기반으로 전자책 시장을 다져온 유럽이나 중국, 단말기 생산 업체와 대형 출판사간의 컨소시엄으로 전자책 시장을 형성한 일본처럼 국내 전자책 시장의 의견 조율이 원만히 해결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민**